

17대 대선, 18대 총선, 한국 정치 지형의 변화

김호기 (연세대 교수, 사회학)

1. '욕망의 정치'가 남긴 것

대선에 이어 총선도 끝났다. 불과 5개월 만에 치러진 두 개의 선거이지만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것 같다. 선거 결과는 일견 곤혹스러우면서도 일견 감상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다름 아닌 민주화 시대가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하는 것 말이다. 하지만 감상과 현실은 다르다. 과연 민주화 시대가 끝난 것일까.

지난 해 나는 시대정신으로서의 민주화가 종언을 고하고 세계화가 본격화됐다고 말한 바 있다. 그래서 보수 세력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맞서서 중도 세력이 '지속가능한 세계화'를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여기에는 사회학 연구자라면 의당 자기 사회 변화의 흐름을 읽고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야 한다는 나름의 고민이 담겨 있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지켜보면 민주화 시대가 정말 지나갔나 하는 판단이 옳은 것인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된다. 민주화 시대란 민주주의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는 시대, 다시 말해 자유, 평등, 인권 등의 가치를 일차적으로 존중하는 시대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의 상황을 지켜보면, 민주화가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가 과거 권위주의 정부로 돌아간다는 의미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나의 고민은 보수적 신자유주의가 본격화되면서 과연 이에 무엇으로 맞설 수 있는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는 데 있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또 추진하려는 정책들을 보면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이제 정말 강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과연 지속가능한 세계화로 이에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을까.

이를테면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욕망의 정치'는 그 한 예다. 욕망의 정치란 뉴타운과 특목고로 상징되는 새로운 투표 성향을 말한다. 내가 알고 있는 한, 국내에서 이 말을 제일 먼저 쓴 사람은 프레시안 윤태곤 기자다. 그는 4월 10일자에 게재된 기사 "뉴타운과 특목고, '욕망 정치 1번지' 서울"에서 욕망의 정치를 주장했다.

나 역시 이 기사에서 인터뷰를 통해 윤기자의 주장에 공감을 표한 바 있고, 약간의 사회학적 아이디어를 붙여 4월 16일 민주당 한반도전략연구원 주최한 총선평가토론회에서 욕망의 정치를 '세계화 시대에 나타난 이익의 정치'라고 정의한 바 있다. 다시 말해, 욕망의 정치는 기존의 이익 투표에 더하여 실현되기 어려운, 사실상 실현될 수 없는 욕망에 표를 던지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서울에서는 뉴타운이 욕망의 진원이었다면, 경기도에서는 특목고가 불을 지폈다.

욕망의 정치에 대해서는 사실판단과 가치판단이 모두 가능하다. 사실판단의 관점에서 보면 이제 우리사회에서도 이익에 표를 던지는 행위가 주요 투표 경향으로 자리 잡아 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치판단의 관점에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서 물질적 가치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이를 어떻게 독해하고 대응할 것인가의 과제를 안겨줬다고 볼 수 있다.

시민사회는 본래 '연대'와 '경쟁'이란 이중적인 조정원리에 의해 재생산되는 공간이다. 문제는 이 두 원리 중 어느 것이 더 지배적인가에 따라 시민사회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점이다. 연대의 원리가 활성화되면 시민사회의 민주적, 협력적 성격이 강화되지만, 경쟁의 원리가 강조될 경우 시민사회는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의 공간으로 변화한다. 민주화 시대에는 연대가 경쟁을 적절히 제어했지만, 세계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슬 풀린 경쟁이

연대를 압도하고 욕망의 정치를 낳은 것으로 볼 수 있을지도 모른다.

아래에서는 두 번의 선거에 담긴 우리 정치지형의 변화를 살펴본 다음, 결론에서는 다시 욕망의 정치로 되돌아와 중도 세력은 이에 어떻게 맞서야 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2. '좌파 신자유주의'의 그늘

정치변동은 국면사적 수준과 사건사적 수준의 두 가지 맥락을 동시에 검토할 때 그 실체가 잘 드러나게 된다. 국면사와 사건사는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의 역사이론을 빌려 온 것이다. 브로델에 따르면, 역사는 하나의 층위로 이뤄져 있지 않다. 그것은 구조적 변화, 국면적 변화, 사건적 변화가 결합돼 있으며, 이 변화들에 각기 구조사, 국면사, 사건사가 대응한다.

국면사적 분석이 갖는 중요성은 한 사회의 주기적 역사를 드러낸다는 데 있다. 우리 사회의 경우 건국, 산업화, 민주화라는 주기 또는 국면들이 교차되면서 진행돼 왔으며, 어느 한 국면에서는 그 주기적 특성이 시대정신으로 발현되어 개별 정치적 사건들에 결코 작지 않은 영향을 미쳐 왔다. 예를 들어, 2002년 대선이 민주화의 국면에서 치러진 선거였다면, 2007년 선거는 '민주화 이후의 국면'¹⁾에서 치러진 선거였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가 내건 '넓은 정치 청산'이 민주화에 대응했다면, 2007년 대선에서 이명박 후보가 내건 '경제 살리기'는 민주화 이후의 국면에 상응했다.

이런 사실들이 암시하는 바는 이번 대선과 총선이 국면의 변화를 보여주는 선거였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국면의 변화는 정치 영역에서 지형의 변화, 무엇보다 민주화 세력의 약화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돌아보면 1987년 6월 항쟁 이후 우리 사회의 정치 지형은 '보수 대 중도'가 양강을 이루고, 여기에 진보 세력이 1약을 차지한 구도를 이뤄 왔다. 냉전분단체

1) 이를 무엇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 중이다. 보수 세력은 '선진화'를 제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중도 및 진보 세력은 아직 대안적인 개념을 내놓고 있지 않다. 이 글에서 잠정적으로 세계화 시대라는 개념을 때때로 활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썩 만족스러운 개념은 아니다.

제 아래 진보 세력의 정치 세력화가 뒤늦게 이뤄진 상황이 반영된 구도였다.

문제는 이 구도가 시민사회의 구도와 부조응을 보여 왔다는 점이다. 시민사회는 대체적으로 '보수 대(對) 중도 대(對) 진보'가 분점하고 있었던 반면에, 정치사회는 '보수 대(對) 중도'가 일종의 과점을 이룬 것이 한국 정치의 특징을 이뤄 왔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사회의 중도 세력은 중도와 일부 진보를 포괄하는 민주화 세력의 정치적 대표성을 갖고 있었다.

이 한국적 구도가 파열을 보인 것은 노무현 정부 아래에서였다. 그래도 김대중 정부는 정책적 보수주의와 정치적 진보주의 사이의 긴장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었던 반면에,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그 긴장이 풀어지면서 중도 및 중도진보 세력의 정치적 이익을 보호하는 데 역량의 한계를 드러냈다. 이런 상황 아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중도 또는 중도진보에 두고 있던 유권자들이 노무현 정부와 집권 여당의 이른바 '좌파 신자유주의' 기획에 대한 지지를 철회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2007년 대선은 이런 정치 지형 아래서 치러졌다. 그리고 그것은 민주화 시대의 종언을, 1987년 이후에 형성된 '민주 대 반(反)민주 구도'의 해체를 알리는 선거였다. 범(汎)여권이 선거에서 패배한 것은, 다시 브로델의 역사 이론을 빌리면, 선거 과정 내내 사건사적 차원에서 '친노냐, 반노냐'의 '노무현 프레임'에 갇혀 있었다는 점, 국면사적 차원에서 민주화 시대에서 세계화 시대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선거 과정을 돌아보면 문제는 비교적 선명히 부각된다. BBK를 둘러싼 공방전이 치열하게 이뤄졌지만, 정작 그 이면에 놓인 것은 성장동력의 확충, 비정규직 노동자와 사회 양극화의 해소, 중소기업과 자영업 문제, 교육과 주택 문제 등이었다. 그 동안 선거에서 주요 쟁점을 이뤘던 남북관계는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았다.

주목할 것은 성장, 일자리, 양극화, 중소기업, 자영업, 교육 등의 이슈는

민주화가 아니라 세계화에 더 밀접히 연관된 쟁점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를 모두 포괄하는 '경제 살리기'라는 보수 세력의 '선진화' 패러다임에 대해 중도 세력 또는 진보 세력은 효과적으로 맞서 오지 못했다.

이런 변화된 상황에 대한 인식이 물론 부재했던 것은 아니다. 선거과정을 복기해 보면 정동영 후보가 내건 '차별 없는 성장'과 문국현 후보가 내건 '사람 중심, 진짜 경제'는 이명박 후보가 제시한 '경제 살리기'에 맞서는 상이한 패러다임으로 볼 수 있으며, 적어도 세계화의 충격이 가져온 변화에 대한 국면사적 인식을 담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사건사적 흐름과 일정하게 조응해야 했는데, 사건사를 주도해 온 노무현 프레임을 극복하고 국민 다수의 이반을 되돌리기에는 너무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대선은 지난 5년 국가운영을 이끌어 온 좌파 신자유주의의 패배로 볼 수도 있다. 좌파 신자유주의라는 말은 좌파와 신자유주의 중 어디에 방점을 둘 것인가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좌파에 방점을 찍을 경우 기존 좌파의 노선을 따르되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것을 말하며, 신자유주의에 강조점을 둘 경우 신자유주의 노선에 좌파의 성격을 덧붙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추측컨대 노무현 정부는 전자의 어법을 선호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지난 5년을 돌아보면 후자의 노선이 현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학적으로 좌파 신자유주의가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은 <세계화 시대의 권력>에서 '신자유주의 좌파'라는 말을 사용한 바 있다.²⁾ 이 말은 좌파이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수용하는 '제3의 길'을 말한다. 서유럽 제3의 길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나름대로 효과를 발휘해 왔다.

하지만 한국의 제3의 길은 그 상황이 적잖이 달랐다. 서구 신자유주의적 좌파의 경우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수용했다 하더라도 기존 복지국가에

2) Ulrich Beck, Power in Global Age, Cambridge: Polity, 2005, 270-271쪽.

서 마련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작동해 왔다면, 한국 좌파 신자유주의의 경우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사실상 부재하기 때문에 세계화의 충격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가 점차 강화돼 왔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개혁을 강조했으되 수사와 담론에 머문 부분이 적지 않았으며, 교육 및 주택정책의 사례처럼 시행착오 속에서 상당한 비용을 지불하기도 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좌파 신자유주의의 그늘은 짙어졌고, 이는 결국 지지계층의 거부 또는 심판으로 귀결됐다고 볼 수 있다.

3. '디제이 정치'를 넘어서

사건사의 시각에서 볼 때 대선 이후 짧은 시간이었지만 기회가 없던 것은 아니었다. 기회는 먼저 밖에서 왔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이명박 정부는 국민 다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영어 공교육, 대운하 프로젝트, 그리고 인사정책 등에서 보여준 이명박 정부의 역량은 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선에서 많은 유권자들이 이명박 후보를 선택했던 이유는 중도 세력에 비해 상대적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 보수 세력의 '국가 능력'이었다. 하지만 그 능력은 현재까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2월 이명박 후보를 선택한 사람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영국의 마가릿 대처가 돼 주길 바랐지만, 아직까지는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안에서도 또 하나의 기회가 주어졌다. 중도 세력은 리더십을 교체하고 '새로운 진보'를 내걸었다. 진보 세력은 민족주의 세력과 좌파 세력이 분화하면서 '진보의 재구성'을 모색했다. 특히 중도 세력은,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것이었으나 하향식 개혁 공천을 통해 지지 그룹의 관심을 다시 불러 모았다. 하지만 이 변화를 지지 확대로 연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영국 노동당 '제3의 길'의 한국적 변형을 새로운 진보의 콘텐츠로 내세웠지만, 그 콘텐츠로 중산층과 서민층을 설득하는 데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다. 민생제일주의를 내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신자유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목록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다.

더불어 선거 전략 또한 그리 효과적이지 않았다. '개헌 저지선 확보'라는 슬로건은 한 예다. 개헌 저지선은 1980년대식 어법이다. 차라리 '대운하 반대 저지선 확보'나 '4대 불안(일자리, 주거, 교육, 노후) 해소 저지선 확보'와 같은 언설이 더 설득력이 높았을지도 모른다. 개헌 저지선이란 80년대를 체험하지 않은 20대에게는 낯선 개념이며, 80년대를 체험한 40대들에게는 진화하지 않는 민주당의 의식을 무의식적으로 드러낸 말이었을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났듯이 중도 세력은 여전히 '디제이(DJ) 정치'에 갇혀 있던 것처럼 보였다. '디제이 정치'란 '호남'을 지역 기반으로 '평화'와 '중산층·서민'에 방점을 찍는 정치다. 이 디제이 정치는 민주화 시대에 결코 작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외환위기에서 벗어났고, 한반도 긴장완화에 기여했으며, 복지국가 기틀을 마련했다.

문제는 디제이 정치가 시효 만료되거나 새로운 진화를 요구받아 왔다는 점이다. '호남'발 지역주의가 수도권에서 약화되고 있고, '평화'는 정치 이슈로서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으며, '중산층과 서민'은 세계화가 강제하는 양극화의 일차적인 희생자들이 되고 있다. 디제이 자신의 필생의 맞수였던 '박정희 정치'가 '실용적 신자유주의'로 변화해 왔는데도, 중도 세력은 아직도 디제이의 정치적 상상력에 머물러 있다.

이런 정치적 상황은 유권자의 표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이명박 정부와 여당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데도 야당의 지지율은 여전히 20% 전후에 머물렀다. 반사이익에 기대는 지지율, 또는 네거티브에 기반한 지지율의 상승은 한계가 있는 법이다. 지난 몇 년간 고정된 지지율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체성에 입각한 포지티브 정책들을 제시하고, 진정성에 기반해 유권자들을 설득했어야 했다.

이 점에서 대선과 총선에서의 창조한국당의 실험은, 비록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더라도 여전히 여러 함의를 던져준다. 창조한국당은 일자리 창출, 교육 개혁, 불공정 하도급 개선 등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뇌관들을 정

공법으로 건드린 '중도적 반신자유주의' 정책들을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중도진보 노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또한 총선에서 문국현 후보가 슬로건으로 선택한 '환경재앙 대운하 반대'는, 통합민주당 역시 이를 강조했지만, 보수 세력에 맞서는 새로운 가치 지향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인상적이었다. '창조적 파괴'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지지를 확장하는 것, 그것이 중도든 진보든 새롭게 부여된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여하튼 총선은 중도 세력과 진보 세력에게 또 한 번의 패배를 안겼다. 299석 가운데 200석을 넘기는 데 성공한 보수 세력이 주도하는 우리 정치는 마치 1990년 3당 합당 이후의 지형으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안겨줬다. 돌아보면 1990년 당시의 정치 지형은 민주화 시대가 막 시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래가 그렇게 암울하지 않았다. 정치사회에서는 보수대연합이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시민운동을 포함한 사회운동들이 부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에 형성될 새로운 보수 주도의 정치는 그 때와는 상황이 적잖이 다르다. 세계화가 강제하는 압박은 빠른 속도로 사회 전체를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 결과 대기업을 포함한 일부 사회조직들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 증대한다 하더라도, 사회 전체가 '두 국민(two nations) 국가'로 분단되는 경향이 두드러질 것이다. '두 국민 사회', '두 국민 경제'가 강화되면서 사회 전체가 더욱 황량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4. '새로운 진보'를 향하여

이제 논의를 정리해 보자. 두 번의 선거가 암시하는 결과는 '민주화 시대'에서 '민주화 이후의 시대'로의 국면의 교체다. '경제 살리기' 담론의 성공은 우리 사회에서 정치지형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축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정치 지형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보수 세력,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소극적으로

수용하려는 중도적 신자유주의 세력, 신자유주의를 선택적으로 수용하되 반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강조하는 중도적 반신자유주의 세력, 그리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거부하는 진보 세력이 경합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정치 지형은 '민주 대 반민주 구도'에서 복합 구도로 변화되고 있으며, 특히 중도 세력의 경우 그 정체성은 모호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중도 세력을 대표하는 통합민주당은 중도적 신자유주의에 가까운데, 문제는 이 중도적 신자유주의가 노무현 정부의 좌파 신자유주의와 큰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무현 정부의 노선을 자기 비판했지만 비전과 정책에서 여전히 극복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번 총선에서 드러났듯이 디제이 정치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욕망의 정치를 다시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시장에서의 효율성과 경쟁력의 제고를 강조하고, 이 효율성과 경쟁력의 증대는 다름 아닌 시장에서의 교환가치를 증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주택은 주거의 공간이 아니라 재산 증식을 위한, 다시 말해 교환가치를 늘리기 위한 수단이다. 영어 열풍도 이와 유사하다. 우리 사회에서 영어는 사용가치가 아니라 교환가치이며, 바로 그 사실을 국민 다수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 교육의 거센 열풍이 불어 온 것이다. 요컨대 신자유주의에는 경제적 시장과 사회적 욕망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있다.

문제가 간단치 않은 것은, 욕망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욕망을 갈구한다는 점이다. 더욱이 욕망의 정치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정치를 압도함으로써 사회 전체를 신자유주의 질서로 재편시키고 있다. 욕망의 정치를 규범적 시각에서 비판만 하는 것은 적어도 '정치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는 계몽인 동시에 현실이기 때문이다. 국민 다수가 그것을 원하고 있다면, 도덕적으로 그른 것이 아니라면, 응당 해야 할 의무를 정치는 갖고 있다.

욕망의 정치에 맞서기 위해서는 이중의 과제가 요구된다. 첫째, 보수 세

력의 욕망의 정치를 경쟁적으로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다수의,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소박한 욕망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대안들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의 하나는 진보 신당 심상정 후보의 교육정책이다. 심후보는 핀란드 교육개혁을 적극 수용해 교육특구를 만들겠다는 공약으로 상당히 선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자율과 규제의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교육의 창의성과 형평성을 결합하려는 이런 시도는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욕망의 정치에 대응해 대안적인 욕망의 정치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부단히 발굴해야 한다.

둘째, 욕망의 정치에 '가치의 정치'를 맞세워야 한다. 정치의 본질 중 하나는 정당들이 갖고 있는 '가치 전쟁'에 있다. 보수 세력이 강조하는 시장, 경쟁, 효율 등에 맞서 중도 세력은 어떤 가치를 제시할 수 있는가. 현재 중도 세력에게는 정책대안 제시도 중요하고, 리더십 구축도 중요하다. 시민사회와의 소통도 필요하고, 전국정당으로 거듭나는 전략도 필요하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중도 세력의 가치와 정체성이 분명할 때 제대로 된 내용을 채울 수 있다. 가치와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에서는 정책들이 선별적으로 조합되며, 그것은 좌파 신자유주의의 사례처럼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고, 결국 중도 세력의 정치적 정당성을 훼손시키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다.

중도 세력의 정체성에 대해 나는 지난 1월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제시한 '새로운 진보'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것은 디제이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성장', 더 많은 '기회', 질 높은 '정의'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성장,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기회의 평등, 그리고 시장과 국가가 아니라 사람과 인권을 중심에 두는 정의는, '민주화'의 가치를 '민주주의 2.0'의 가치로 성숙시킬 수 있는 출발점이기도 하다. 새로운 진보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사회에서 민주화 시대는 종언을 고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주주의 2.0 시대'를 열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바로 이점에서 중도 세력은 가치와 정체성이 분명한 중도 진보 세력으로 새롭게 진화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신자유주의를 이분법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닐 것이다. 효율성, 경쟁력은 형평성, 공공성 못지않은 세계화 시대가 요구하는 주요 덕목들이다. 우리 사회가 놓인 현재적 조건을 고려할 때 개방의 문제 역시 이분법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평성과 공공성을 배제한 채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 우리 사회의 미래가 될 수는 없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도외시한 개방 사회 역시 우리가 갈망해 온 열린사회는 결코 아닐 것이다. 효율성과 경쟁력만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그런 황량한 사회가 아닌, 인간적인 가치와 공공성을 존중하는 그런 기품 있는 미래를 열어 가는 데 중도진보 세력이 다시 한 번 더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를 기대한다.

김호기

1960년 경기도 양주 출생. 연세대학교 사회학과와 동대학원 졸업. 독일 빌레펠트대학교 사회학 박사. 미국 UCLA 사회학과 초빙연구원. 현재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요 저작으로는 [현대 자본주의와 한국사회], [한국의 현대성과 사회변동], [한국 시민사회의 성찰] 등이 있음.

계간지 **광장 Agora** 창간준비호

재단법인 광장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4-2 월드비전 B/D 401호

Tel. 02-780-6616 / Fax. 02-780-6618